

##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안

의안 번호	83
----------	----

발의년월일 : 2003. 03. 19.

발 의 자 : 기획행정위원장

### 1. 주 문

성숙한 지방자치 시행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과감한 중앙 권한의 이양을 촉구하기 위한 선언임

### 2. 제 안 이 유

가. 최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 요구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나.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21C에는 중앙집권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조성하는 한편

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참여 정부에 촉구하고자 함

### 3. 참 고 사 항

“없 음”

-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  
**지 방 분 권 선 언**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21세기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환경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사고로는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국가발전에 대한 중앙중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할 때가 왔다고 확신한다.

그동안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가속화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중앙집권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는 국가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여전하며, 실질적 자치권은 이양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절름발이의 지방자치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과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첫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존립에 관제되거나 전국 통일성이 강조되는 기능을 제외한 본질적으로 지방적인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양에 따른 후보지를 조기에 확정하여 지역갈등

과 국력소진을 없애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지역특화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하여 교부세율의 인상과 세목을 조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기관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지역의 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방대학의 적극 지원 육성과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신분을 명예직에서 유급직화 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등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03년 3월 19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